

동유럽의 변혁과 사회주의의 장래

김 세 균*

<目 次>	
I.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로	III.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물 탁과정
II.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IV. 결 론

1989/90년은 동유럽 사회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진 해이다. 이 해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 유럽 전역에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파고가 넘친 1848년, 역사상 최초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1917년 등과 비견될 만하다. 동유럽에서 1989/90년에 이루어진 대변혁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공산당에 의한 (실질적인) 국가권력 독점체제가 붕괴되고 이를 대신해 다원주의와 자유선거 및 의회제에 기초한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동유럽에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선 후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를 통해 폴란드, 동일 이전의 둉독, 헝가리, 체코에서는 부르조아 자유주의 세력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자유사회주의적’ 성격의 개혁사회주의 세력이 집권세력이 되었다.

둘째, 그간 ‘노동자 자주관리’에 입각한 시장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는 ‘완료적 중앙 계획경제’로 특징지워졌다. 이 체제는 이제 완전히 과산했으며, 이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개편시키는 작업이 어디에서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개편작업은 부르조아 자유세력이 집권한 나라에서는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경 내지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대대적인 사유화과정과 더불어 진척되고 있다. 개혁사회주의 세력이 집권한 나라에서도 시장경제 체제에로의 개편과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더불어 생산수단 및 토지의 사유화과정이 상당한 규모로 진척되고 있다.

셋째, 부르조아 세력이 집권하면서 동독은 곧바로 서독으로 흡수·통합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를 특징지운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아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경향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자본주의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가리켜 준다. 이 글은 동유럽의 이러한 변혁과정이 지닌 특징과 의의 및 이 변혁과정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지닌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동유럽에서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몰락이 왜적·간접적으로 사회주의 자체의 몰락 내지 사회의 자본주의적 개편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선상에서 이 변혁과정의 의의 및 그것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지닌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I.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로

2차대전 이후 동유럽에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 것은 무엇보다 동유럽이 소련군에 의해 파시즘 통치로부터 해방된 데에 힘을 입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소련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세력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파시즘 민족해방운동에서 중요한, 나라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유럽의 많은 인민들 역시 전후에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편을 지지했다. 이 점에서 소련군의 진주는 동유럽의 사회주의화 과정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 준 데에 더 큰 의의를 지닌다. 이 사실은 그리스나 이태리 등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반파시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대대적으로는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지만, 이들 국가들이 서방세계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될 수 없었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1944/45년 적군이 동유럽국가들을 해방함과 더불어 공산당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타 정치세력들과 더불어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조직하고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구성에 착수한다. — 세로이 구성된 이 정부 속에서 공산당의 영향력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공산당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나라가 루마니아였다면, 유고슬라비아의 신정부는 처음부터 거의 전적으로 공산

당에 의해 조직되었다 — 런던에 아직 부르조아 정파의 임시정부가 존재하는 속에서 1944년 7월 21일에 ‘폴란드 국민해방위원회’가 창설된 것은 이러한 과정의 시발점을 이룬다. 루마니아에서는 1944년 8월 독일과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부르조아 정부가 수립되고— 이 정부에는 단지 2개의 장관직이 공산주의자에게 배정된다— 불가리아에서는 1944년 9월 10일 ‘애국전선정부’가,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1944년 12월 21/22일 ‘헝가리민족독립전선’의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1942년 말 지역해방위원회에 기반을 둔 ‘반파시즘민족해방평의회’가 구성된다. 이 기구는 1943년 11월 인민최고 주권기구로 발전한다. 1945년 3월 7일에는 유고슬라비아연방민주공화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알바니아에서는 1944년 3월 ‘민족해방평의회’와 이 평의회에 책임을 지는 ‘민족해방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1944년 10월 알바니아 임시민주정부로 발전한다. 끝으로 1945년 4월 초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국민전선 정부가 출범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출범한 신정부의 강령은 —물론 나라마다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루마니아의 최초의 신정부 강령을 제외한다면, 사회경제적·정치적 변혁을 지향하면서도 어디에서나 소련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내용을 지닌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강령들 속에는 그 이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명칭된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고 있는데, 1942년 10월 27일에 채택된 이 새로운 전략은 유고슬라비아 ‘반파시즘 민족해방평의회’의 강령적 선언, 1941년 11월에 채택된 알바니아 공산당 창립대회의 선언, 불가리아 애국전선의 강령, 1944년 6월에 채택된 헝가리 민족독립전선의 강령 등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리하여 소련군이 진주한 유리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변혁과정이 —비록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동유럽 전역에서 진척된다. 이 변혁과정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된 나라는 유고슬라비아이다. 반면 1945년 3월에 가서야 인민전선 정부가 수립된 루마니아에서는 1946년 11월 선거에서 인민전선불력이 80%의 득표로써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1947년 12월에 인민공화국이 선포된다. 부르조아세력이 매우 취약했던 불가리아에서는 공산당이 이끈 애국전선이 1945년 11월 선거에서 이미 89%의 득표율을 얻어 승리함으로써, 1946년 9월에 인민공화국이 선포된다. 헝가리에서는 1945년 11월 선거에서 농민당이 승리하지

만, 1947년 여름 선거에서 좌익 블럭이 다수를 획득한다. 이에 상당한 자본주의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노동자계급이 존재했으며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체코슬라비키아에서는 1946년 선거에서 공산당이 38%를 득표함으로써 사회민주당과 더불어 다수를 차지한다. 가장 복잡한 과정을 거친 나라는 1947년까지 국민전선 블럭과 부르조아 세력 간에 무장충돌이 계속되었던 폴란드이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도 1947년의 선거에서 국민전선 블럭이 80%의 득표로써 승리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혁도 진척되었다. 대토지 소유제는 모든 나라에서 제거되며 공업시설의 사회주의적 국유화과정이 각 나라마다 그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칼베(E. Kalbe)에 의하면, 이러한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정이 특히 소련에서의 혁명과정에 대비해 지닌 특징은 ① 프롤레타리아 국가 형성과 구지배계급의 경제적 권리박탈의 절진성, ② 정치적 변혁과 사회경제적 변혁의 밀접한 결합, ③ 혁명적 민주세력 간의 광범한 동맹과 계급세력들의 낮은 분산성 및 ④ 계급투쟁이 주로 평화적 방식으로 수행된 것 등이다. 특히 그는 노동자계급과 민주적 사회세력 간에 광범한 동맹이 형성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채워진 전통적인 민주적 제제도와 형식 및 다당제가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편에 적극 활용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Kalbe, 1978:30f.).

칼베가 지적하다시피, 동유럽에서의 인민민주의 혁명과정은 그것이 사회주의에의 이행과정이라는 기본성격을 지니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광범한 대중적 기반을 획득해 나가면서 권력문제와 사회경제적 변혁 과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점에서 동유럽의 사회주의화 과정은 소련의 그것과 구분된다. 실제로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전략은 —적대적인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전면적으로 포위된 속에서 부르조아 세력들과 격렬한 투쟁을 벌이면서 소비에트 체제를 구축한 소련과는 달리—동유럽에서는 적군의 동유럽 진주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편을 광범한 계급연합과 국민적 지지에 기초해 평화적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었다. 또한 이 인민민주주의 전략은 소련식의 공산당 유일지배 체제와는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사회변혁 과정이 수행될 수 있고 또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형성된 이 시기의 ‘인민민주주의론’은 다당제 민주주의적 전통을 사회주

의의 전설에 활용하며 반파시즘·반독점 인민전선에 가담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이 대중적 지지와 이데올로기적 설득력에 기초해 사회주의의 전설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인민민주주의론은 타계급들에 대해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인정하며 국가 집행기구에 대한 인민주권 기구의 우위와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서 제시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러한 새로운 전략에 기초해 이 인민민주주의론을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소비에트 민주주의’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정식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는 디미트로프(Dimitroff)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Appelt, 1946:339ff.), 이들 중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깊이 있는 이론적 작업을 행한 이는 루카치(G. Lukács)였다. 1922년 「역사와 계급의식」을 쓸무렵 그의 정치적 입장은 급진좌파적이었다. 1928년에 「브룸태제」(Blum-Theorie)⁽¹⁾를 작성한 이후부터 그는 이미 진보적인 부르조아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할 것을 주창해 왔다. 1945년 스페인으로부터 형가리로 돌아온 이후 그는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성장하는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옹호했다 (Lukács, 1985: 363ff.). 나아가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동(東)사회민주당과 더불어 1946년 4월 ‘사회주의 통일당’(SED)을 결성한 독일공산당(KPD) 역시 인민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독일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길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²⁾ 이러한 연관 속에서 피에크(W. Pieck)는 KPD 15회 대회에서 “현 독일의 특수적 상황에 일치하는 사회주의에로의 새로운, 민주적 길”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Parteitags der KPD, 1946:210). 그리고 1947년에 쓴 두

(1) 1928년 Lukács는 형가리공산당의 위임을 받고 강령초안인 “Über di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Lage und die Aufgaben der KPU”를 작성했는데, 이 초안은 이후 Lukács의 익명에 따라 ‘Blum태제’로 알려졌다. 이 초안 속에서 Lukács는 당시의 코민테른 노선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를 사회파시즘으로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소중한 투쟁목표이며 부르조아계급을 배제시키면서도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민주적 독재’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Bd. 6, Berlin 1966, p.111f., 721ff., 388f.;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SED*, Bd. 2, Berlin 1986, S. 17ff., 34ff. 및 A. Ackermann, “Gibt es einen besonderen deutschen Weg zum Sozialismus?,” *Einheit*, 1946/7 참조.

편의 논문 속에서 둔커(H. Dunker)는 오늘날 독일에서는 파시스트적 부르조아지가 괴멸함으로써 혁명과 개량 간의 대립이 해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은 러시아혁명이 적대적 세계와의 전쟁상태 속에서 치루어야 했던 난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루비너(Rubiner) 역시 우리는 러시아혁명 속에서 형성된 프롤레타리아독재형태를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Einheit, 1947:330ff.; Rubiner, 1947:334ff.). 이러한 주장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1945년 7월 14일에는 동독지역의 KPD, SPD, CDU(기독교민주당) 및 LDP(자유민주당)가 ‘반파시즘 민주정당 블록’을 결성함으로써 동맹의 폭이 확대된다. 1949년 동독 헌법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슈타이니거(P.A. Steiniger)와 폴락(K. Polak)은 이러한 사태 발전을 반영하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발전된 이론체계를 제시한다. 슈타이니거는 새로운 헌법체계로서 ‘블럭체제론’을 제시하고 있으며(Steiniger, 1949:7, 13, 21, 35, 38, 41, 54, 62, 68), 폴락은 민주주의란 “인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해방과정이며, 인민 위에 선 권력을 인민 손에 놓인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관료지배의 폐기, 국가기구에 대한 의회지배의 확립 및 이를 통한 인민의 정치적 생활의 활성화를 제창한다(Polak, 1968:2295). 이와같이 사회주의 전설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론으로서의 초기 인민민주주의론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련하여 많은 새로운 실천적·이론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전설에 민주주의적 전통을 활용하며 소련에 있었던 정치체제의 왜곡을 회피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그러한 논의의 기저에 놓여 있었다(Heuer, 1989:271).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전통을 보존·계승하면서 동유럽에서는 소련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형성된 초기 인민민주주의론은 그러나 — 초기 인민민주주의 시기에 형성된 ‘블럭체제’를 형식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통해 그 이후에도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는 소비에트 체제와는 다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서 계속 규정지워지지 만 — 1947/48년을 기점으로 동유럽 정치체제의 ‘실질적인’ 스탈린주의화가 진척되면서 사실상 폐기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초기의 ‘인민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스탈린적 정치체제 내지 국가적·관료적 사회주의 정치체제에로의 이행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동유럽에서 왜 사회주의와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지닌 진보적 유산의 결합을 시도한 초기 인민민주주

의적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를 사실상 후퇴시킨 국가적·관료적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이행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이유로서는 ① 동유럽이 소련의 세력권에 편입됨으로써 소련이 동유럽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 ② 동유럽 역시 소련의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는 점, ③ 이러한 조건 속에서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 속에서 스탈린노선을 추종하는 분파가 동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스탈린주의에서는 ① 반파시즘적·반독점적 정당들의 다당제적 협력체제인 ‘블럭체제’가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민주적 일형태로서 가능할 수 있으며, ② 독점부르조아지의 정치적·경제적 권리가 박탈될지라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계급들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정치적 수준의 계급동맹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가형태가 — 타 정치세력들이 독점부르조아 진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 바로 그러한 다당제적 블럭체제라는 사실이 무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체제가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체제로서 기능하려면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이 대중적 지지와 자신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설득력에 기초해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관철시켜 나갈 능력을 지니는 것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가 된다. 이와는 달리 스탈린주의에서는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여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체제 이외에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체제로서 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한 속에서 국가권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제한없이 활용하는 것이 사회주의건설에 있어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스탈린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중적 지지와 힘에 의거하는 사회주의 건설노선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가를 활용하고 정치적 강제력의 사용에 의거하는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스탈린적 노선에서는 다당제적 블럭체제로서의 인민민주주의체제란 — 그 속에서 설령 공산당이 대중적 지지에 의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일형태로서 파악되지 않으며, (소련식의 공산당유일지배 체제나 또는 블럭체제에 포함된 타 정치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에 사실상 종속되는 정치체제로서 이해되는 바의) 프롤레타리아국가체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이행기적 국가체제 — 부르조아 국가체제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국가체제에로의 이행기적 국가체제 —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

한 스탈린적 관점에 서면, 사회주의 국가체제란 공산당 유일지배 체제이거나 공산당에 의한 실질적인 국가권력 독점체제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 동·서관계가 급격히 냉전체제로 이행해 간 것은 동유럽의 스탈린주의화를 결정적으로 촉진시킨 요인으로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945년 이전에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루즈벨트 대통령 중심의 ‘평화공존노선’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및 정치적 압박을 중시하는 ‘냉전노선’이라는 두개의 상치되는 노선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공포됨과 더불어 미국의 대외정책은 ‘봉쇄’(Containment)와 ‘롤·백’(Roll-Back)을 목표로 하는 ‘냉전노선’으로 결정적으로 전회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동유럽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는데, 미국의 이러한 냉전정책은 동유럽 내부의 경제를 극도로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권과의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시키며 또 이를 위해서도 동유럽의 반파시즘적 계급연합 체제를 장기간 유지시키려 한 소련을 극도로 자극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에로의 신속한 이행’이냐 아니면 ‘자본주의에로의 후퇴’이냐를 선택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는데, 동유럽 정치체제의 급속한 스탈린주의화는 이러한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책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 것이었다.

미국의 냉전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1947년 9월 소련공산당이 주도하는 ‘공산당 정보국’(Kominform)이 각국 공산당들의 노선을 조정할 목적으로 창설된다. 이 대회에서 코민포름은 오늘날 세계가 적대적인 양대진영으로 구분되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파시즘적 제국주의와 인민대중 간의 모순이 해결된 동유럽에서는 노·자 모순의 해결을 통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심화가 요구된다는 선언을 채택한다. 그리고 1948년 6월에 열린 코민포름 대회는 유고슬라비아를 비난하는데, 그 이유는 유고슬라비아가 최근에 이르러 대·내외적 정책의 주요문제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한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동유럽 각국에서는 ‘우익민족주의적 편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가해지며, 이 과정 속에서 폴란드의 Gomulka, 불가리아의 Kostov, 헝가리의 Laszlo Rajk, 체코의 Slansky, 알바니아의 Kochi Yove, 루마니아의 Patrascanu와 같은 많은 토착공산주의자들이 숙청된다. 1948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3만명의 당원이 폴란드 공산당으로부터 숙청된다. 체코에서는 1948년 8월에 10만명이

공산당으로부터 제명되며, 약 50만명이 경당원으로부터 후보당원으로 강등된다. 그리고 1949년부터 1950년 사이에 9만2천5백명이 불가리아 공산당으로부터 숙청된다(Harman, 1988:51). 이러한 과정이 진척됨과 더불어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가 주어졌다. 1948년 12월 디미트로프는 사회주의에로의 인민민주주의적 이행의 기능변화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지금 까지는 당은 경제적·정치적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먼 미래의 일로 간주했지만, 자본주의의 기초를 그대로 두면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조치를 행함이 없이는 전진적 운동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전의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과 오류를 제거하고 교정할 것을 제창하면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지도 하에 있는 인민의 압도적 다수인 근로대중의 지배체제로서 규정한다. 나아가 그는 현 시기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경제를 조직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제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imitroff, 1950:5, 57, 58, 62). 폴란드의 비어루트(Bierut)도 이 시기에 인민민주주의에 대해 디미트로프가 행한 것과 같은 규정을 내린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 G.루카치의 이론적 입장이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는데, 그에 대한 비판의 논점은 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로의 이행을 매우 장기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부르조아 리얼리즘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Hermann, 1978:292).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정식화가 지닌 특징은 ① 부르조아적 전통이 지닌 진보적 유산을 보존·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익기회주의’로, 그리고 사회주의에로의 ‘특수적 길’ 내지 ‘유럽적 길’을 주장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② 이에 상응해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적 변혁과정이 소련에서의 변혁과정에 대해 지닌 공통성·동일성 및 모든 나라에 관철되는 사회주의 발전의 일반적·보편적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Heuer, 1989:298).

동유럽 정치체제의 스탈린주의화는 1950년경에 대체로 완료된다. 이 이후에도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적 변혁과정이 지닌 ‘특수성’은 지적되지만, 소비에트 체제에 대해 지닌 동유럽 정치체제의 특수성은 —다당제적 블럭체제가 형식적으로는 계속 유지되지만— 사실상 사라진다. 그럼에도 ‘특수성’이 말해질 수 있다면, 그 특수성은 동유럽에서 스탈린적 정치체제가 수립된 ‘과

정'이 지닌 특수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스탈린주의화와 더불어 산업의 국유화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1950년대 초기에 이르러 완료된다. 이와 아울러 농업의 집단화 역시 꾸준히 진척된다. 유고슬라비아와 소농들의 광범한 저항에 부딪쳐 집단화를 포기한 폴란드를 제외한다면 이 과정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동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완결된다.

Ⅱ.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동유럽 체제의 스탈린주의화는 소련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형태로 진척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초기에 성립된 동유럽의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는 처음부터 자생성과 대중적 기반을 크게 결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가 지닌 모순들은 소련에서 보다 동유럽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응축·표출되면서 한편으로는 체제유지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내적 개혁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내적 개혁은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사회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 나가기 보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점들의 사회주의적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이 진척될수록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인민대중의 불만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스탈린적 사회주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자체가 인민들에 의해 배척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가 지닌 기본적인 특징과 문제점 등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 마르크시즘은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들의 사회주의에로의 동시적 이행을 후자본주의 사회구성을 고찰하는 '이론적' 전제로 삼았다. 그런데 실제 역사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뒤덮던 지역에서 최초로 성공했고, 그것도 '일국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혁명이 최초로 성공한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체제는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되었다. 나아가 소련은 높은 생산력을 지닌 적대적인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전면적으로 포위된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 속에 놓여있었다. 내전이 끝난 이후 소상품생산이 압

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후진적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한 레닌의 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³⁾

첫째, 혁명에 의해 창출된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국가독점자본 및 사적독점자본 부문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물적 기초를 확보한다. 이에 기초해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지만 경제에 대한 국가적 계획과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둘째, 국유화되지 않은 소상품생산 부문과 사적 자본주의 부문은 노동동맹을 유지시키고 사회주의적 부문의 탄력적인 발전을 위해 허용하면서 장기적 과정을 거쳐 서서히 소멸시킨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적 부문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경쟁을 통해 자본주의적 부문을 흡수·통합해 나가며, 소농적 농민 경제는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공업의 광범한 지원과 농민들의 자발적 창의에 기초해 일차적으로 상업적 기초 위에서 작동하는 협동조합적 생산체계로 변화·발전시킨다. 사회주의적 부문이 시장관계 속에서 사적 자본주의 및 소상품생산 부문들과의 경제적 경쟁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적 농업경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만큼,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적 계획과 통제 역시 확대·심화시킨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부문이 확대되고 사회의 생산력 발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활용하는 계획은 사용가치 생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국가계획으로 전화·발전시킨다.

셋째, 사회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적 계획과 통제가 확대·심화 되면 ‘사회의 국가화’ 역시 그 만큼 확대·심화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인민대중의 문화적·기술적 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국가권력에 대한 인민대중 자신의 민주적 통제가 확대되고 생산현장 조직과 소비에트 조직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인민대중에게 국가권력이 더욱 이전되어 가는 것을 통해 확보되는 ‘국가의 사회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이와같이 ‘사회의 국가화’ 과정이 ‘국가의 사회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척됨으로써 ‘국가의 비국가로의 전화과정’ 내지 ‘국가소멸 과정’이 진척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이 진척됨으로써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전화·발전한다.

(3) 이에 대해서는 좋고, “사회주의의 변화—그 역사적 의의와 함의—,”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1990.8.20~22) 발표논문 p.2ff.; Y. Ambartsumov, *NEP: a Modern View*, Moscow, 1988. 및 같은이, *How Socialism Began: Russia under Lenin's Leadership*, Moscow, 1977. 등을 참조.

네째, 국가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위당이 국가생활 속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생활에서의 전위당의 이 지도적 역할은 당과 노동대중의 결합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대중의 자발적·창의적 작업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또한 국가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국가를 소멸시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은 정치적 강제력기구이며 인민대중 전체를 사회주의적으로 통합시키는 최종심급인 국가기구와 가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은 항상 인민대중 속에 존재하면서 대중을 정치적 주체로 상승시키는 것을 통해 인민대중과 융합되어가야 한다.

스탈린은 평생 자신이 레닌의 충실한 제자이며 레닌주의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자처했다. 그러나 그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레닌노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이 스탈린노선에 입각해 추진된 것은 유럽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신생 소비에트 체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도발이 현실적 위협으로 가중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지닌다. 그러나 다름아닌 스탈린노선이 소련에서 확립된 데에는 러시아의 국가주의적인 문화적 전통과 사회주의를 시급히 실현시키려는 볼셰비키의 주관적 열망 및 스탈린 자신의 정치적 성향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스탈린에 의해 추구된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다(김세균, 1990:2).

첫째, 스탈린은 세계자본주의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포위공격으로부터 소비에트체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주의적 공업력의 확보를 최우선적 과제로서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소련은 급속한 중·화학공업화에 요구되는 경제적 잉여를 농촌으로부터 추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이로인해 스탈린은 농촌으로부터의 경제잉여 추출에 가장 효율적인 국가통제 체제를 수립할 목적으로 ‘농업집단화’를 유혈적·강제적으로 추진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강제적 농업집단화 정책은 중·화학공업화의 강행과 더불어 당시 소련이 치한 객관적 상황에 의해 강제된 측면을 상당히 지니고 있었지만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본래적 목표와 방식 및 레닌의 구상으로부터는 훨씬 벗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그 이후 농업집단화의 강행을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노선

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일반노선으로 정당화했다.

둘째,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집단화를 강행하면서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소유—국가적 소유와 국가적 통제 하에 있는 협동조합적 소유—에로의 전일화를 통한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단일계획경제체제의 확립을 사회주의 실현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일화된 단일계획경제체제를 사회적 생산력을 계획적·균형적으로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체제로 정당화했다. 이러한 노선에서는 소유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전일화시키고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단일계획경제를 수립하는 것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시급히 성취되어야 할 절대적인 과제가 된다. 그리고 이 노선은 ‘자본주의의 급격한 폐기노선’ 내지 ‘비상품경제적 사회주의관’을 대변하는데, 레닌은 이러한 사회주의관을 —비록 그 역시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회주의를 그와같이 이해했지만— 1923년 ‘신경제정책’(NEP)를 추진하면서부터는 명백히 포기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일화된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계획경제체제의 수립은 레닌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 반면, 스탈린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로부터 ‘사회주의단계’에로의 진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 점에서 레닌적 입장에 서면 스탈린의 사회주의관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의 목표로 추구되어야 할 것을 사회주의 단계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역사발전에 대한 주관주의적 개입주의 내지 주관적 계급투쟁주의를 대변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스탈린의 사회주의관은 ① 비사회주의적 소유형태들—자본주의적 소유 및 소상품생산적 소유—이 상당기간 인민의 증대하는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주의적 생산 부분의 탄력적 발전을 위해서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② 이로 인해 생산력의 진보를 아직 사회주의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많은 부문을 사회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내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상품·화폐관계 및 가치법칙이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따라서 활용하면서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신속히 제거되어야 할 자본주의의 ‘유체’로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아가 스탈린은 국가강제력을 활용해 ‘법률적’으로 성립시킨, 이로 인해 실질적 내용을 지니지 못한 채 형식적 사회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산부문을 대거 포함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기초한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계획경

제 체제를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미화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변화·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사회적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혁에 따르는 계급적 저항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위로부터의 대중동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강제력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이러한 사회변혁 작업과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당적 작업을 절대화하는 속에서 당에 의한 국가권력 기구의 직접적인 활용을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스탈린은 ‘당에 의한 국가집행권력의 직접적인 장악’을 응호했으며, 인민주권 기구인 소비에트 기구와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들의 직접적인 자기조직들을 국가를 직접적으로 장악한 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송벨트’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스탈린체제 하에서 당의 실천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자립화되어 ‘당과 국가의 융합’ 내지 ‘당의 국가기관화’가 진척되었다. 또한 당내부에서도 당내 민주주의는 소멸되었으며, 모든 권한은 지도자 일인 내지 당·국가 최고간부들에게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주권 기구와 노동대중의 직접적인 자기조직들이 무력화되었으며, 국가권력이 국가와 융합된 당과 당·국가관료층으로 집중된 속에서 사회경제적 과정 전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통제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계획경제 체제란 계획권한이 당·국가 관료층에 의해 독점되는 비민주적인 ‘관료적 중앙 계획경제 체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스탈린에 의해 응호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란 계획권한이 당·국가관료층에게 집중된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인 지시·명령적 중앙 계획경제 체제이다. 나아가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계획경제 체제를 완벽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이 관료적 계획경제의 기술적 완벽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통해 이 계획경제 체제가 지닌 지시명령적·비민주적 성격이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계획경제 하에서 사회화과정이 국가적 통제와 관리 하에 놓이게 되면 될수록, ‘사회의 국가화’는 광범히 진척되지만 ‘국가의 사회화’는 진척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의 사회화’를 동반하지 않는 ‘사회의 국가화’는 ‘국가의 소멸’과는 역의 과정인 ‘국가의 강화’를 가져올 때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국가에 집중된 정치는 경제와 고도로 결합하지만, 정치가 인민대중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과정에 대한 인

민족 통제와 관리 내지 인민적 정치와 경제의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해 우리는 그 ‘전형적’ 형태에 있어서의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으로서 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절대적’ 주체로서의 당, ② 국가를 통한 당노선의 ‘직접적인’ 관찰과 국가활용의 절대화, ③ 당에 의한 국가권력의 직접적 장악과 당의 국가기관화, ④ 당·국가관료층에게 계획권한이 집중된 관료적 지시·명령 계획경제 체제의 수립, ⑤ 인민주권기구와 대중조직들의 당·국가에로의 종속화, ⑥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로의 전일화에 기초한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단일 계획경제 체제의 수립, ⑦ 중공업 우선적 경제발전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지닌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는 —‘농업집단화’를 추진하지 못한 폴란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다시피— 동유럽 사회 속에서 아무런 변형 없이 그 순수한 형태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최초에 성립된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 이후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는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①부터 ⑤까지의 특징들을 폐기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이 다섯가지의 특징들은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들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체제가 사회의 생산력 발전 수준 및 인민들의 문화적·기술적 수준이 아직 낮은 상태 속에서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자원들을 국가계획에 따라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는 —특히 당에 대한 노동대중의 신뢰가 높은 경우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적 공업력을 발전시킴에 매우 효율적임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실제로 스탈린 체제 하에서 소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국가로 탈바꿈했는데, 소련의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은 1차 대전 이후 미증유의 세계적 대공황의 늪에 빠져있었던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또한 2차대전 이후의 전후 복구사업에서 스탈린적 계획경제 체제는 그 체제가 지닌 효율성을 남김없이 발휘했다. 이러한 사정은—소련이 파시즘 격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절대적 권위를 누리게 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우위성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그러한 사정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스탈린적 계획경제’라는 등식을 아울러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주관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가장 빠른 속도로 실현시키고 사회주의의 공산주

의에로의 전화·발전을 앞당기는 것으로 옹호되었지만 —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는 보편타당성을 지닌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 절대화된다—, 객관적으로는 그 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모순들로 인해 사회주의의 발전을 왜곡하고 또 이로 인해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에로의 전화·발전을 봉쇄하는 체제로서 기능한다. 스탈린적 사회주의가 왜 그와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가와 융합한 당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절대적 주체’로 격상되고 국가활용이 우선시되는 반면, 노동대중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위로부터의 단순한 동원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사태는 당을 ‘대중 속에 존재하는 당’이 아니라 ‘대중 위에 군림하는 당’으로 변질시키며, 당적 작업의 관념화·신비화 및 당·국가관료층의 특권화·부폐화 등을 촉진시킨다. 이는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이 인민대중 자신의 창의적·자발적 작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당과 노동대중 간의 괴리 및 사회주의로부터 인민대중의 이탈을 촉진시키며, 또 이로 인해 사회주의를 유지·발전시킬 사회적 힘을 내부적으로 고갈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은 경향적으로 더욱 특권화되어가는 당·국가 관료층의 전담업무로 왜소화된다. 이 점에서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주의의 건설을 대중들의 중대하는 민주적 요구와 결합시킬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 점이 이 체제의 몰락을 초래한 결정적 이유이다.

둘째,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가 중공업 발전 우선 노선을 채택한 것은 사회주의적 공업국가에로의 진입을 앞당기고 생산재부문의 발전을 소비재부문의 발전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농업생산력의 대폭적인 발전과 경공업의 발전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공업 발전은 인민대중에게 최대한의 절약과 소비욕구의 억제를 요구하는데, 당·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인민의 경제적 생활을 압박하는 중공업 우선 노선은 처음부터 대중의 광범한 불만을 야기시킨다. 실제로 자생성과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건설은 인민들의 불만을 일찍부터 누적시켰는데, 이러한 불만의 표출은 초기적 체제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적으로 전일화된 속에서의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계획경제는 생산의 집중과 기업간의 결합 및 적집적인 생산과정

속에서 생산과 과학의 결합 내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의 지양이 고도로 진척된 속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증대하는 인민들의 집단적·개인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만 훌륭히 작동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조건 속에서만 계획경제 체제는 사회경제과정에 대한 지적으로 성숙한 직접생산자들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에 기초해 고도로 민주적인 비국가적 계획경제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적 계획경제는 생산력 수준이 낮은 초기 공업화 단계에 성립된 노선으로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최대한 투입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생산물의 물량적 확보를 목표로 하는 지시·명령 계획경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국가관료에로의 계획권한의 집중과 사회경제과정에 대한 위로부터의 정치의 강력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경제 체제는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 속에서의 계획경제 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이다. 나아가 사회적 분업이 진척되고 생산물의 종류가 풍부해지면 비가치법칙적인 물량적 계획경제는 많은 한계 점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러한 형태의 계획경제는 점차 생산물들의 가치 산정을 위해 화폐적 범주를 활용하는 계획경제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업들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불가능한 속에서 생산의 기초단위인 사회주의적 기업들 간의 분업이 증대함에 따라 상품·화폐관계가 더욱 더 기업 간의 관계를 매개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된다. 또한 자원과 노동인력을 사용가치의 생산만을 위해 단순히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기업이 경제계산체적 원리에 입각해 경영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더욱 증대하게 된다. 나아가 과도한 형식적 사회화로 인해 사회주의적 생산부문만으로 인민의 증대하는 욕구를 충족시킴에 한계에 부딪치면, 특정부문에서 개인적·가족적 소유형태를 재인정하게 되며—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소련에서는 지하경제가 성립함으로써 그러한 소유형태들이 실질적으로는 출현했는데, 이러한 비합법적 제2경제권의 형성을 국가당국 역시 사실상 묵인했다.— 나라에 따라서는 소규모의 사적 자본주의부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독점자본 부분을 국유화하고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를 확대시키면서도 사적 자본주의부문과 소상품생산부문을 적극 인정하면서 이들 부문을 사회주의경제로 점차 흡수·통합시키며, 나아가 시장경제적 기초 위에 선 계획경제를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계획경제로 전화·발전시킨다는 레닌의 사회주의 발전구상과는 정반대의 발전과정을 스탈린적 계획경제 체제가 밟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은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가 전(前)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와 시장메카니즘 등을 급격히 폐기함으로써 주관적으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현을 앞당기려고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생산력의 증대와 생산의 사회화과정이 지닌 자연사적 측면 내지 인간의 주관적 의지로부터 독립된 사회경제적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탈린적 계획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도 갈수록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더 많이 도입하는 과정을 밟게된다. 그러나 그러한 도입을 통해 관료적 계획경제체제의 기본특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관료적 계획경제 체제는 생산력발전 수준이 낮은 초기 공업화 단계에 생산자원들과 무엇보다 풍부한 인력의 대규모적인 투입을 통한 경제의 ‘양적’ 성장 내지 ‘외연적 공업화’를 이루함에는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유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더 많은 생산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외연적 방식에 의한 경제의 양적 성장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친다. 따라서 외연적 방식에 의한 공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는 ‘외연적으로는 충분히 발전했고, 따라서 이제는 내포적·질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력의 내포적·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스탈린적 계획경제 체제’ 간의 모순은 점차 확대·심화된다. 나아가 정치와 경제과정의 관리·통제로부터 노동대중을 배제시킨 속에서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스탈린적 사회주의경제 체제는 점차 위로부터의 대중동원 또는 위로부터의 지시·명령 내지 정치적 강제에 의해 노동대중의 생산의욕을 북돋는데에 있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또한 이 체제는 노동대중이 비정치적 경제적 동물로 치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일은 가능한 적게 하고 소득은 가능한 많이 얻으려는’ 사회적 풍조를 만연시킨다. 그러나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이제는 그들의 경제적 소득을 가능한 높여 줌으로써 노동대중으로부터 ‘수동적’ 지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스탈린적 체제 하에서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규율’의 해이경향을 막을 적합한 수단을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해 노동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물질적 자극’은 노동대중이 더욱 경제적 동물로서 치신하는 것을 촉진시킬 뿐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조되는 ‘도덕적 자극’이란 점차 별다른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위로부터 확정된 계획목표의 초과달성이 최우선시되고 강제되는 상황 속에서 생산실적에 대한 허위보고가 만연하게 되며, 또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획득하려는 기업경영층과 노동자 간의 결탁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전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부정적 현상들이 대거 출현한다. 또한 대중적 참여와 통제가 결여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국가관료에 의한 계획은 대중의 구체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업별·지역별 특수성들을 고려하는 효율적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어떤 부문에서는 낭비적 투자를, 어떤 부문에서는 과소투자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의 최적균형적 발전을 이루한다는 스탈린적 계획경제 체제의 본래적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며 계획경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야기시킨다. 이로 인해 스탈린적 계획경제 체제는 생산력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점차 생산력의 내포적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변한다.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적 침체국면에 빠져들거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질적 경제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명과 생산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동시에 노동규율을 재확립함으로써 노동대중이 열심히 생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적 계획경제 체제가 전면적으로 혁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에 대폭적으로 접목시키는 ‘부르조아적 방식’과 노동대중을 사회경제적·정치적 과정의 주역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주의를 보다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프롤레타리아적 방식’이 상정될 수 있다.

(부르조아적 방식)이란 ① 관료적 계획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변경시키며, ② 소상품생산과 사적 자본주의 부문을 대폭적으로 인정하며, ③ 당·국가 관료층을 대신해 기업경영층·중간관리층·과학기술 인력이 기업을 관리하는 주역이 되도록 하며 ④ 기업경영층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이 오직 수익성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며, ⑤ 국가수준에서의 관료적 통제를 대신해 노동대중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며, ⑥ 기업으로부터 과잉노동력을 추방하고 해고와 실업의 위협과 같은 ‘경제적 강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인 (경제적) 강제 하에 놓이게 하며, ⑦ 노동생산물의 가치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도록

록 하며, ⑧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오늘날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노선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개혁 노선으로 확립되고 있다.⁽⁴⁾ 이 노선은 한마디로 소상품생산과 사적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부문을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하려 하는 노선으로서 사회경제 전체의 재자본주의화를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대조되는 프롤레타리아적 방식은 ① 설령 형식적으로 사회화된 부문을 재자유화시키고 상품·화폐관계를 인정할지라도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의 우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며, ② 기업운영을 민주화시키는 기초 위에서 이 민주성을 과학기술 인력의 전문성과 고도로 결합시키며, ③ 노동대중들의 자기조직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활동에 대한 이들 조직들의 대중적 통제와 이들 조직들의 자치적 권한을 대폭적으로 제고시키며, ④ 모든 수준의 민주권 기구들을 생산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들 기구들에 대한 노동자 대표성을 높이며, ⑤ 국가권력의 중심을 당·국가 관료층으로부터 민주권 기구로 이전시키며, ⑥ 이를 통해 노동대중을 정치와 사회경제과정 관리의 진정한 주역으로 끌어 올리며, ⑦ 이를 통해 설령 정치적 다원주의를 인정할 지라도—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해방모니가 전사회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며 ⑧ ‘관료적 계획경제’를 민주대중의 보다 많은 직접적인 자기결정에 기초한 ‘민주적 계획경제’로 전환시키며, ⑨ 또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높은 정치의식과 자각적 책임의식을 지니게 된 노동대중의 자기결정성에 입각해 높은 노동규율을 유지시키고 노동자들이 생산에 헌신적으로 임하도록 하며, ⑩ 특정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력과 노후시설의 폐기 등으로 생겨나는 유휴인력을 타부문에 민주적·계획적으로 이전시키는 것 등이다.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발전의 향방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의 두 방식 중 어느 하나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다. 따라서 부르조아적 방식이든, 프롤레타리아적 방식이든, 어느 하나의 방식에 입각해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혁신되려면 그러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당 내에서나 또는 당 외부에서 형성되고, 이 정치세력에게 국가권력이 이전되어야 한다.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는 그러나 부르조아적 방식을 통해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지니는데, 그 이유는 스탈린적 체제가 행하는 경제개혁이란 ‘관료적’ 계획경제를

(4) 고르바초프노선에 대해서는, 콜고, 위의 글, p.17ff. 참조.

‘민주적’ 계획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료적’ 계획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부르조아적 요소들을 도입해 ‘관료적’ 계획경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린적 체제는 노동대중을 사회과정의 진정한 주체로 끌어올리는 프롤레타리아적 방식에 의한 사회개편에는 적극 저항하면서도, ‘관료적’ 계획경제를 보존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부르조아적 개편에 갈수록 더욱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의 재자본주의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소유관계에 기초한 시장사회주의로의 전면적인 개편이나 또는 (동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와 같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전면적인 파탄을 준비해 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대중을 사회경제적·정치적 과정의 주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지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저지하는 스탈린적 체제는 당과 노동대중과의 괴리와 사회주의로부터의 대중의 이탈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건설을 대중의 자발적·창의적 작업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사회적 힘을 내적으로 고갈시킨다.

둘째, 스탈린체제 하에서 행해지는 개혁은 부르조아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관료적 계획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개혁은 관료적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의 프롤레타리아적 해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행해지는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은 한편으로는 관료적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속에서 부르조아적 요소들을 도입함으로 인해 관료적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관료적 계획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더욱 어렵게 하며, 또 이로 인해 관료적 계획경제의 전면적 폐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러한 개혁은 부르조아적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세력을 형성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또한 부르조아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속에서 관료적 계획경제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그 작동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당·국가 관료층은 관료적 계획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폴란드와헝가리에서는 1989/90년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공산당이 전면적인 시장경제적 개혁안을 제출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는 공산당 자신이 관료적 계획경제의 완전한

파탄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관료적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온존되는 속에서 행해지는 부분적인 시장경제적 개혁은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전면적인 부르조아적 개편을 더욱 절실한 것으로 만들 따름이다.

III.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정

지금까지 우리는 동유럽에서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몰락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과정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내재적인 발전경향성과 관련시켜 논의하였다. 그러나 동유럽 사회의 변화 과정을 고찰할 때에는 동유럽에 미친 소련과 서방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아울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소련은 정치적·군사적 개입을 통해 동유럽 사회의 내재적 변화과정에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부여했으며 스탈린적 체제에 대한 대중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를 계속적으로 존속시킨 결정적 힘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소련은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동유럽 사회에 사회주의가 자생적 뿌리를 내리면서 변화·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와 소련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폐레스트로이카 과정은 동유럽 사회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면서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동유럽에 대해 내정불간섭 정책을 취하게 됨에 따라, 동유럽 사회는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 점에서 동유럽에 미친 소련의 영향력은 이중적이다. 즉 소련은 한편으로는 소련식 사회주의를 강제함으로써 동유럽에 사회주의가 자생적 기반을 지니면서 변화·발전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유럽에 폐레스트로이카 열풍을 불어 넣음으로써 동유럽의 변화과정이 폭발적인 대변혁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서방 자본주의 사회가 동유럽에 끼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의 데탕트국면에서 서방 자본주의와 경제관계를 대폭적으로 증대시킨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위기경향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경제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둘째, 동유럽은 역사적·지리적으로 서유럽으로부터 사상적·문화적으로

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동유럽의 인민들은 관료적 사회주의의 대안을 발전된 서유럽의 경제구조와 정치질서로부터 찾는 경향성을 보여왔다. 스탈린적 사회주의를 비판한 동유럽의 마르크주의자들 역시 대체로 부르조아적 가치와 이념의 ‘지양’을 모색하기보다 마르크시즘이 지닌 ‘한계’와 ‘결합’을 부르조아적 가치와 이념에 의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Holtz, 1972). 이로부터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가 부르조아적 제도와 가치의 진보적 측면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나아가는, ‘선진’ 자본주의의 진정한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에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셋째, 동유럽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은 대체로 소비재 부문 보다 생산재 부문을, 개인적 수요 보다 집단적 수요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직결되는 경공업 부문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 했으며, 특히 개인적 소비에 관계되는 산업 부문의 발전은 극히 저조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서유럽에서는 2차대전 이후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개인적 소비에 관계되는 산업 부문이 일찌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로 인해 이와 대조되는 동·서 유럽민들의 생활 상의 격차는 체제에 대한 동유럽인민들의 불만을 크게 증폭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된 이후의 동유럽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변동과정의 주요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⁵⁾

(1) 1947/8년~1956년 : 이 시기는 동유럽 사회에서 초기적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 공업화는 국민의 소비생활을 극도로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미 이 시기에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던 스탈린주의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광범하게 누적되었다. 그런데 1956년 소련공산당 20차대회에서 행해진 스탈린 비판은 동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

(5) 1989년 이전까지의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변동과정에 대해서는 W. Brus(鶴岡重成譯), 東歐經濟史 1945~80, 東京 1984; Chris. Harman, op. cit.; 동구사 연구회편,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1990, 제9, 10, 11장 및 D. Scase(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1990, 제 8 장 등을 참조할 것. 그리고 1989/90년의 동유럽의 변동과정에 대해서는 “Special Issue: Reformpolitik in der DDR und Osteuropa,” Politische Studien 311(1990.5.6), München; “Special Issue: Perestroika in Eastern Europe,” Telos Nr. 79 (1989, Spring) 및 동유럽은 어디로(I), (II), 서울 1990 등을 참조할 것. 시대구분은 동유럽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회기를 그은 중요한 정치적 계면을 중심으로 필자가 행한 것임.

을 안겨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토착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개혁 운동이 본격화된다. 다른 한편, 동유럽 경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 침체국면에 접어드는데, 이를 배경으로 1956년 폴란드에서, 그리고 이에 이어 헝가리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규모적으로 폭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에서는 고물카 정권이,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나지(Nagi) 정권이 수립된다. 그러나 헝가리의 나지 정권은 소련의 무력개입으로 인해 곧 붕괴되고 나지정권을 대신해 카다르(Kadar)정권이 수립되었다. 헝가리사태 이후 고물카 정권은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자주성을 획득했지만 소련의 대외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종했으며, 국내적으로는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2) 1956년~1970년대초 : 초기의 체제위기를 넘긴 후 동유럽의 여러 신스탈린주의 정권들은 임금인상, 생산규율의 폐기와 같은 경제적 양보, 안정적 경제성장 전략의 강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개혁에 착수한다. 특히 헝가리는 1968년 신경제메카니즘(NEM)을 도입하면서 이미 시장경제적 개혁에 착수한다. 그러나 동유럽 경제는 대체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것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 초기에 새로운 대중적 저항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68년의 체코 사태이다. 이미 상당한 경제적 발전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체코는 동독과 더불어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와 같은 초기적 위기를 거치지 않았지만, 1963년 이후부터 경제불황 국면에 빠져든다. 이를 배경으로 당내부에서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 치열해 지는데, 이 대립에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내건 개혁파가 승리함으로써 1968년에 두브체크(A. Dubcek)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나 이 정권은 개혁의 여파가 타국으로 전파될 것을 두려워 한 소련의 군사적 개입으로 붕괴된다. 소련의 군사적 개입으로 두브체크 정권이 붕괴된 것은 동유럽에서 당내부의 개혁공산주의 세력이 정치적 해제로 나를 쥐고 체제를 개혁할 기회를 최종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다른 한편 60년대 내내 경제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폴란드에서는 1970년 고물카 정권을 대신해 기에르크(Gierk) 정권이 들어선다.

(3) 1970년대초~1981년 : 1970년대에 접어들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선택한다. 그러나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성장 전략은 외자도입에 의해 진정한

경제개혁을 대체한 것으로 관료적 계획경제의 병폐를 온존시키고 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킨 효과를 지닌 것이었다. 그런데 1973년 이후부터 심화된 자본주의의 경제불황은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한다. 특히 많은 외자를 도입한 폴란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1976년 이후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폴란드에서 1980년 독립노조 운동인 ‘연대노조’ 운동이 출현한다. 이 연대노조 운동은 1981년의 군사정변에 의해 진압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로부터 노동대중의 이탈이 결정적으로 진척되었다. 실제로 그 이전의 노동자대중의 운동은 체제 내적 운동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1980년의 ‘연대노조’ 운동 역시 ‘노동자 자주관리’와 비록 막연한 것이었지만 ‘노동자 자주관리’에 입각한 ‘노동자자 치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연대노조’는 군사구데타 이후에는 급격히 우경화되어 자유시장 경제와 생산관계의 사유화를 주장하게 된다(Ost, 1989:69). ‘연대노조’의 이 우경화는 스팔린적 사회주의의 몰락이 사회주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4) 1981년~1989/90년 : 이 시기에도 동유럽의 경제는 동독·불가리아를 제외하면 계속 침체하며, 이를 배경으로 헝가리 등지에서는 시장경제적 개혁이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된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모범국인 동독에서도 내포적 공업화 체제에로의 이행은 매우 완만했으며, 서독과의 기술적·경제적 격차 역시 더욱 확대된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특히 폴란드의 경제사정은 파국 직전의 상태로까지 악화된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조속한 외채상환을 위해 국민들에게 극도의 내핍생활이 강제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로 누적된다. 나아가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당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련에서 추진된 페레스트로이카는 특히 ‘국가생활의 민주화’에 대한 동유럽 인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엄청나게 증대시키면서 1989/90년의 ‘대전환’의 기폭제가 된다.

1988/89년의 ‘대전환’에 불씨를 당긴 것은 1989년 2월에 폴란드 야루체스키(W. Jaruzelski) 정권과 바웬샤(Lech Wałęsa) 중심의 ‘연대노조’ 간에 이루어진 ‘원탁회의’였다. 이 ‘원탁회의’는 1988년 7월 폴란드를 방문한 고르바초프로부터 내정 불간섭의 협약을 받은 야루체스키 정권이, 경제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폭적인 시장경제적 개혁을 모색하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대노조’ 세력과의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원탁회의’는 ① 집권공산당이 최초로 정치적 반대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② 이를 통해 공산당이 스스로 권력독점 을 포기했고, ③ 자유선거와 의회제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다원주의 체제 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인정했으며, ④ 그 이후 동유럽 변혁과정의 ‘원형’을 제공해 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이 원탁회의에서 양당사자들은 의 회제적 민주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에 상호 합의했지만, 1989년 4월 선거에 서 연대노조가 압승함으로써 폴란드의 정치적 변동과정은 결정적으로 촉진 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사실상 동유럽 전역에서 공산당 몰락이 임박했음을 가리켜주는 것이었다.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연대노조’가 압승함으로써 폴란 드에서는 연대노조의 지지를 받은 마조비에키(Mazowiecki) 정부가 들어선다.

폴란드에 비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헝가리에서는 포즈가이(Pozgay) 중심의 개혁사회주의 세력이 당내 투쟁에서 승리한다. 이들 개혁파는 1989년 10월 당의 명칭을 ‘헝가리 사회당’으로 개칭하고 스탈린주의와 공산당 일당 치매 체제의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1990년 3월의 총선에서 ‘헝가리 민주 포럼’이 승리했다. 폴란드·헝가리에서 불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풍은 곧이어 동독을 강타한다. 이 열풍은 1989년 10월 호네커의 퇴진→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년 12월 6일 한스·오드로 연립정부의 수립→1990년 5월 총선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공산당의 패배를 거쳐 최종 적으로 ‘동독의 소멸’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열풍은 체코에서 1989년 12월 후사크의 사임과 비공산세력 중심의 임시정부 수립을, 루마니아에서는 1989년 12월 최악의 국가적 위기와 유혈사태를 겪친 후 차우세스쿠 정권의 붕괴를, 그리고 불가리아에서는 1989년 12월 지프코프(Zhivkov) 서기장의 퇴진과 ‘위로부터의 개혁’을 가져왔다. 그리고 1990년 봄과 여름에 있었던 자유 총선을 통해 체코에서는 하벨(Havel) 중심의 ‘시민광장’이, 불가리아에서는 블라데노프(Mladenov) 중심의 ‘불가리아 사회당’이,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일리에스쿠(Ion Iliescu) 중심의 ‘루마니아 구국전선’이 승리했다. 자유선거를 통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개혁사회주의 세력이 승리했지만,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자본주의화의 물결 속에서 이들 세력이 얼마만큼 사회주의를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들 사회주의 세력은 고르바초프노선을 지지하는 우경적 개혁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1989/90년의

이러한 정치적 격변을 통해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는 동유럽에서 최종적으로 몰락한다.

IV. 결 론

스탈린적 사회주의는 당을 모든 연관으로부터 자립화된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역사에 대한 주관적 개입을 통해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현을 조속히 앞당기려고 시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스탈린적 사회주의는 국가활용을 사회주의 건설의 수단으로 절대화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스탈린적 사회주의 노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것이었다.

첫째 스탈린적 사회주의관은 역사를 어떤 자립된 ‘주체’의 자기실현 과정 내지 주체의 자기실현을 위한 외화현상으로 보는 주체론적 역사관과 역사가 주체의 (이미 주어진) 목적이나 의지를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는 목적론적 역사관을 대변한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주체론적·목적론적 접근은 신이나 헤겔의 ‘절대정신’의 자리에 ‘당’을 대체시킨, 역사에 대한 헤겔주의적 접근 내지 헤겔주의적 마르크시즘의 일형태이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목적의식적 활동의 집중적 표현으로서의 당적 작업이 비록 부분적으로는 역사에 주체적·목적론적 성격을 부여하지만, 총체적으로는 그 작업이 ‘중층적 모순들의 운동’으로서의 역사과정 내지 ‘주체없는, 비목적론적인 역사과정’의 일부임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 동시에, 중층적 모순들의 운동이 만들어내는 역사과정의 ‘객관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당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격상시킨 것은 당과 노동대중 간의 괴리와 당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의 독점과 사회주의로부터의 대중의 이탈을 촉진시켰다.

둘째,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조속히 앞당기려고 한 것은 ‘당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스탈린적 입장의 논리적 귀결이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개입은 그러나 무엇보다 생산력의 발전 및 이에 따른 생산의 더욱 증대하는 사회화 과정이 지닌 ‘자연사적’ 성격 내지 생산력 발전과 생산의 사회화 과정이 사회관계의 변경을 통해 비록 촉진되거나 지연될 수 있지만 초역사적으로 비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러한 개입은 생산력의 발전 및 생산의 사회화 과정이 전사회적으로 일률적·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노력에 의해 변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균등하게 진척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따라서 그러한 입장은 역사에 대한 ‘주관적 개입주의’ 내지 ‘주관적 계급투쟁주의’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러한 ‘주관적 계급투쟁주의’는 그것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실현되면서부터는 역사발전에 대한 완전한 ‘진화론적 경제주의’로 전환되었다.

셋째, 사회주의 건설에 국가활용을 절대화한 것은, 사회주의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정치’의 강력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또 그것을 통해 성취한 성과를 절대시한 사실의 뒷면이다. 그러나 국가활용의 절대화는 ‘당과 국가의 융합’ 내지 ‘당의 국가기관화’를 초래했으며 당과 노동대중과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노선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무엇보다 ‘노동대중의 힘에 의거해 건설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을, 사회적 해방을 추구하는 노동대중 자신의 창의적·자발적 작업으로 고양시킨다는 사회주의 본래의 목표 및 건설방식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체제는 적군의 진주, 반파시즘 인민전선 내부에서의 사회주의 세력의 해체모니, 반파시즘·반독점 민주변혁에 대한 국민의 광범한 지지 등으로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소련에 의해 강제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스탈린주의화는 사회주의가 동유럽에 자력으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가 지닌 모순들은 동유럽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폭·폭발했는데, 그럼에도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규정력과 군사적 개입 때문이었다. 나아가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개혁은 노동대중을 사회경제적·정치적 과정의 주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서방 자본주의에의 의존성을 높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스탈린적 체제의 부르조아적 극복을 필연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체제는 서유럽에 의해 견인되고 소련의 패레스트로이카로부터 충격을 받는 가운데 소련이 동유럽 정책을 변경함에 이르러 급속히 몰락하게 되었다.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오늘날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의 이러한 실패는 무엇보다 ‘초기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이 체제를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

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발전시키지 못한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오늘날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은 사회주의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더욱 밀착시키고 사회의 재자본주의화에 활짝 길을 열어주는 우경적 사회주의 개혁노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오늘날 많은 부르조아학자들은 사회주의의 종말과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승리가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입증된 것은 스탈린적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의 특정의 현상형태’가 동유럽과 소련에서 최종적으로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과 동유럽의 자본주의화와 소련 사회주의의 우경화로 자본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현 시점에서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곧 스탈린적 사회주의라고 보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몫이해이다. 나아가 설령 현존 사회주의 체제가 모두 몰락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주의 운동 자체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현실적 운동이자 이념이므로,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극복에 대한 요구는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의 사회주의의 (거대한) 패배로부터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단정하는 것은 현실의 세계가 지닌 모순성과 역동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몰락으로부터, 그리고 우경적 사회주의의 한계점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미래에 있어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1)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으로 자처한 당이 왜 노동대중으로부터 자립화되고 괴리되는 과정을 밟게되었는가의 문제 즉, 당과 노동대중의 융합에 관한 문제

(2) 생산력 발전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증대과정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문제

(3) 생산력의 발전을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역할의 증대를 통해 확보하는 문제

(4) 사회관계의 변혁을 인민대중의 자발적·창의적 작업으로 만들어나가는 문제

사회주의가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이론적·실천적으로 옳게 해결해 나간다면, 현시기의 사회주의의 패배는 미래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현

김세균

1990 “사회주의권의 변화—그 역사적 의의와 함의—,”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1990. 8. 20~22) 발표논문.

동구사회연구편

1990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동유럽은 어디로 (I), (II)

1990 서울

Ackermann, A.

1946/7 “Gibt es einen besonderen deutschen Weg Zum Sozialismus?,” *Einheit*.

Ambartsumov, Y.

1977 *How Socialism Began: Russia under Lenin's Leadership*. Moscow.

1988 *NEP: a Modern View*. Moscow.

Appelt, R.

1946/6 “Ein neuer Typus der Demokratie: Die Volksdemokratien Ost und Südosteuropas,” *Einheit*.

Brus, W. 鶴岡重成 역

1984 「동구경제사 1945~80」, 동경.

Dimitroff, G.

1950 *Rolle und Bedeutung der Volksdemokratie*. Berlin.

Harman, C.

1988 *Class Struggles in Eastern Europe 1945~83*. London/Chicago/Melbourne.

Hermann, I.

1978 *Die Gedankenwelt von G. Lukács*. Budapest.

Heuer, U.W.

1989 *Marxismus und Demokratie*. Baden-Baden.

Holtz, H.H.

1972 *Strömungen und Tendenzen in Neomarxismus*. München.

Kalbe, E.

1978 “Methodologische Probleme des Revolutionsvergleichs von Oktoberrevolution und Volksdemokratischer Revolution,” in: *Le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22/1, Berlin.

Lukács, G.

1985 "Über aristokratische und demokratische Weltanschaung," 1985/2 *Sinn und Form*

Ost, D.

1989 "The Transformation of Solidarity and the Future Spring of Central Europe," *Telos*. Nr. 79.

Polak, K.

1968 *Reden und Aufsätze*. Berlin.

Rubiner, F.

1947/4 "Diktatur und Demokratie," *Einheit*.

Scase, D.

1990 「체제비교 사회학」, 한상진역, 서울.

Steiniger, A.

1949 *Das Blocksystem*. Berlin.

Bericht über die Verhandlungen des 15. Parteitags der KPD, Berlin. 1946.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SED, Bd. 2, Berlin. 1986.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Bd. 6. 1966.

Einheit

Politische Studien

Telos